

## 박정희 시대의 민주화 운동

더 이상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존재하기를 그쳤다. 물질과 허세만이 왔다갔다 한다. 보이지 않는 공포와 강력한 경멸의 뒤범벅을 우리는 오늘의 삶이라고 부른다. 게다가 그 공포와 그 경멸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 하나. 그러니 그 삶이라는 것에 손이 닿자 말자 손은 썩기 시작하고, 그 삶이라는 것에 발을 들이말자 말자 발을 썩어 버린다. 그 문드러진 팔다리로는 힘이 떨어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거짓과의 타협을 우리는 오늘의 삶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더 많은 거짓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싸우고 있다. 술보다 더 지독한 마약이 필요하다.

(정현중, “노우트 1975“)

김동춘(성공회대학교사회과학부)

### 1. 왜 민주화운동인가?

70년대 민주화 운동에 가담했던 많은 인사들이 문민정부 이후 정치권과 관료사회에 진출하고, 이후 민주화 세대가 이 현 여당의 다수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민주화기념사업회가 설치되고 민주화운동명예회복과 관련 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아직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기억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화운동의 철학과 이념이 확고하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작동원리로 제도화, 체화되어 우리사회에 정착하지 못하였으며, 민주화 운동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공식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법 행정 영역 등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감각과 의식의 수준이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위해 민주화를 유보할 수 있다고 보았던 박정희 시대의 논리는 오늘날 지구화된 경제질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삼성, 두산 등 법을 어긴 기업과 기업주에 대한 비판과 처벌도 자제되어야 한다는 지배 논리로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 파시즘식의 문화와 사회심리는 사회 모든 구성원을 오직 한쪽으로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류적 시각과 다른 입지에서 있는 사람을 의심하거나 탄압하는 체제라고 본다면 75년 이후 유신말기의 박정권에 의해 조장된 파시즘적 문화와 논리는 지금은 다른 형태로 부활,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박정권 하의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군사독재 비판과 거부라는 차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재구조화의 동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당시 민주화 운동가들의 자세나 그들이 내걸었던 구호, 담론 어느 한 장을 들추어보더라도 그 운동의 진정한 의미는 독재를 철학적 민주주의로 변화시키는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으며, 거꾸로 70년대 유신체제를 지지, 옹호했던 세력이 왜 지금에 와서도 민주정신은 물론 자유정신도 갖지 못하고, 인간존중의 원칙을 갖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 2. 유사 파시즘으로서 유신체제, 지배와 저항의 의미

극우 이데올로기이자 지배체제로서 파시즘 혹은 유사파시즘은 시기와 나라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지닌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민주주의의 좌초, 경제위기, 중간층 몰락, 도덕적 진공 등의 배경과 맥락에서 나타난다.<sup>1)</sup> 물론 단순한 군사독재, 권위주의,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단에 대한 과도한 충성요구, 폭력을 앞세워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들, 지도자에 대한 종교적 숭배, 민족의 우월성 과시 등의 내용을 특징으로 한다. 2차 대전 이후의 군사독재는 과거 전통적 파시즘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을 등장시켰고, 동의를 창출하려 하기 보다는 강압을 전면화한 72년 유신 75년 긴급조치 이후의 박정희 체제도 그에 근접해 있다.

파시즘은 폭력적 지배의 정당성을 보편적인 경구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정체성의 가장 확실하다고 간주되는 요소로부터 이끌어 낸다.<sup>2)</sup> 대체로는 종교, 건국의 신화, 민족의 신화 등이 그것인데, 한국의 경우는 한국 전쟁, 반공주의, 70년 미.중 관계 정상화와 동서화해 이후의 남한 국가 정체성의 위기의식 등이 그 위치를 차지한다. 대체로 아도르노(Adorno)가 말한 것처럼 사회에 내재하는 문화 종교적 권위주의와 정치적 파시즘은 친화력을 갖는데,<sup>3)</sup> 보수적 권위주의 심리적 토양은 파시즘이 등장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편견, 자민족중심, 인종주의, 독단주의, 가부장주의 등이 바로 그것이다. 편견과 독단주의는 표준적인 것, 혹은 공동체 내의 이질적인 존재 혹은 정서적 거부감을 주는 세력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과 멸시, 더 나아가서는 폭력과 억압을 용인하고 동조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과거 서구사회에서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억압이 그 좋은 예라면 50년대 이후는 국가 혹은 집단 내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유주의, 평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대표적이었다. 파시즘은 규율, 복종, 순응을 강조하고 상급자에게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 인간을 칭찬한다. 권위주의 퍼스낼리티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한다.

파시즘은 군사화시킨 국가에서 창궐한다. 독자적인 판단력도 갖지 않은 채, 부당한 명령도 무조건 복종하는데 길들여진 군인과 관료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파시즘은 쉽게 뿌리를 내리고, 또 지금까지 대다수의 파시즘은 사실상 군사주의 국가, 전쟁 상황에 있는 국가들에서 나타났다. 군사주의 원리는 사회의 모든 영역을 그러한 모습대로 재편을 하고, 모든 조직의 상사를 군대의 상관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다. 이 군사주의 요소를 갖는 파시즘은 인간을 도구화하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무시한다. 국가안보의 위기의식과 적에 대한 집단적 공포는 국가 내부의 의심되는 구성원들에 대한 고문, 테러, 학살 등 반인도적이고 반인권적인 억압을 정당화한다. 형식적인 민주주의인 선거가 존재하기는 하나 그것은 조작되고, 여론을 뒤틀려지는데, 이 모든 왜곡이 동의의 이름으로 버젓이 행해진다.<sup>4)</sup>

유신헌법의 부칙에 “이 헌법의 제정과정에 대해 제소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압권이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폭력 지배체제였다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다. 유신헌법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기본권 존중 원칙을 위배한 법이었다. 대통령은 국회를 언제나 해산할 수 있는 권한,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의 성격을 상실, 법관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은 완전히 무시되었다. 학원을 병영화하고 학교 교수를 비롯한

1) 로버트 O. 팩스틴, 손명희·최희영 옮김,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교양인, 2004, 463-481쪽

2) Robert O Paxton, "The Five Stages of fascism", [www.cursor.org/stories/fascismxiii.php](http://www.cursor.org/stories/fascismxiii.php)

3) Theodor, Adorno,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W W Norton & Co Inc; Abridged/Revised edition, 1993(1950)

4) Wahkonta Anathema, Fascism in America, *Politics*, December 25, 2003

행정직원을 학생사찰 요원화되었다. 학교에서는 학도호국단 등 관제 학생조직이 지배하였으며, 압도적 다수의 학생들은 폭력의 두려움 때문에 순응하는 상황이었다.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실상 불법화되었고, 공장 새마을 운동은 철저하게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래서 박정권 말기에는 인간보다는 상부의 지시가 우선시되고<sup>5)</sup>, “사람으로서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인권유린의 현장”이 도처에 나타났고, “철거민에 대한 가혹한 인권유린은 공산당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을 만들기 위한 것”<sup>6)</sup>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는가하면, “전체사회가 거대한 감옥으로 변질되는 현실”<sup>7)</sup>이 나타났다.

물론 파시즘은 경제 발전, 물질적 번영, 완전고용과 안정적인 성장 등을 정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1939년 히틀러 당시 독일이 바로 그러했고, 72년 이후 박정희 정권이 그러했다. 대공황의 위기를 겪은 이후 나치는 경제 활력을 가져왔고, 실업율은 격감했고, 성장은 지속되었다. 범죄는 감소했으며, 사회는 안정되었다. 히틀러는 질서와 번영을 가져왔다.

유신 이후 입법부의 1/3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정회 국회의원으로 채워졌던 현실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고 있었으며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고문과 테러, 살해가 만연했다. 그런데 이것을 일각에서는 대중적 지지에 의한 파시즘, 혹은 대중독재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유신헌법 통과에 대중들이 지지를 보냈고, 박정희가 추구한 안보/성장주의 연합세력으로 민중이 참가했으며, 당시의 민주화 운동에 대중들이 거의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분석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한국 대중들은 이 지배체제의 구축과 운영과정에서 초대된 적이 없고, 또 발언권을 가진 적도 없으며, 또 그 체제가 대중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작동된 적도 없다. 박정희 성장 이데올로기가 이들의 정신을 사로잡은 것은 사실이었으나,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체제의 유지에 가담하지는 않았고, 또 지배집단도 그들을 적극 동원, 포섭하지 않았다.

한국의 농민, 노동 대중들의 ‘현상학’은 70년대 중 후반은 기본적으로 30년대 말 40년대 초 일제 말 전시동원 파시즘 체제와 유사했다. 당시 중화학 공업화, 중등 붐의 경제적 성과는 일부 노동자와 대졸 출신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분명히 공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압도적 다수의 노동자나 농민은 그러한 혜택 밖에 존재하였다. 이 유신이라는 불법체제, 절대권력 하에서 권력자의 부패와 부정, 편법은 만연되었다. 노예적 정신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가혹한 채찍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그러한 저항할 수 없었다.<sup>8)</sup>

### 3. 누가 저항하였나?

유신 하의 유사 파시즘 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침묵 복종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세력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은 누구였나? 학생, 종교인 등 재야세력이 바로 그들이었다. 지식인 혹은 정치사회 내의 배제된 인사들의 결집으로서 ‘재야’ 세력은 ‘시민사회 내의 비시민’인 학생들의 동원과 투쟁 위에서 성립했다. 1960년에서 1987년 사이에 가장 중요한 민주화운동세력은 학생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은 가장 중요한 저항세력이었다.

5) 초등학교 교장이 유실수 심으라는 당국의 시책이 무서워 아이들보다 유실수가 먼저 보인다고 실토하던 체제였다. 김수환, “교회와 인권문제”,( 1973.12.16)

6) 사랑방교회 라기화.변복남 교우대표, “호소문”, 1975.5(NCC인권위원회, 1859)

7) “3.1 민주선언”,(1978.2.24, 윤보선 외( NCC, 1909-1910)

8) 최근 출간된 8.15 직전 보통 한국인들의 기록을 참조. KBS광복60년 특별프로젝트, 『 8.15의 기억』, 한길사, 2005

70년대 80년대 중간까지의 민주화 운동 관련 수행자들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우선 70년에서 79년 사이 전체 2,704명 중에서 학생과 청년이 1,197명으로, 다음이 노동, 농업 관련자가 242명이며, 성직자가 82명이고 종교단체 종사자 50명, 언론인 문인이 82명, 회사원 연구원 70명, 교직이 52명, 빈민이 43명이다. 학생, 청년, 성직자, 언론인, 문인, 교직자를 모두 지식인으로 본다면 70년대 민주화 운동은 지식인인 재야세력과 당시 조건에서의 준지식인인 학생들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세력의 비중은 적어도 구속자 수에 관한한 10%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과 재야세력이 대체로 중간층 출신이며, 중간층의 자유주의적 계급문화를 견지한 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중간층을 대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였다.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중간층의 운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존스(Jones)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중간층이 획일적인 국가교육, 유교문화의 영향 때문에 서구의 중간층과는 달리 자유주의적이지 않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중간층이 민주주의를 철저히 옹호하기 보다는 ‘질서’를 강조하고, 권위주의 정권에 복종하는지를 물으면서 서구의 시민사회 개념이 동아시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중간층이 태생적으로 시민의식과 권리의식, 민주화의 신념으로 무장되지 않은 존재였다.

60년대 개발주의 하에서 농민들은 박정권에 대해 어느정도 동의를 표시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민과 노동자들이 박정권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조희연이 강조했듯이 그들이 개발독재의 능동적 참여자 혹은 하위 파트너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sup>9)</sup>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존의 욕구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국가, 지역사회, 직장 내외에 억압과 위계 구조 내에서 수동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개인, 가족차원에서 생존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나 정치사회의 주역은 물론 시민사회의 주역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 물론 그들의 수동성은 결과적으로 지배 질서 유지에 순응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순응을 「대중독재론」의 주창자들처럼 박정희 파시즘의 오른 팔 역할을 한 것으로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일부 노동자들의 민주노조운동과 저항운동, 농민들의 저항운동은 비록 정치적 목표를 갖는 것은 아니었으나 중요한 저항운동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안보/성장 체제와 논리에 대한 대중적 반격이었다.

### 3. 민주화 운동의 동학과 철학

#### 1)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

박정희 시대 민주화 운동은 주로 자유민주주의 쟁취를 내용으로 하는 반독재, 반파시즘 운동이었다. 파시즘, 국가주의, 국가지상주의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인권의 가치들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것은 억압과 획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고, 국가가 우리의 삶의 자율적 공간을 마구 침범하여 우리가 자신의 운명의 노예로 변화는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다. 이 운동은 대체로 자유주의와 민중주의의 철학과 노선을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강압적 지배가 노골화된 72년 이후 민주화 운동에서 나타난 모든 구호에는 유신헌법 폐지, 학원의 자유, 학도호국단 폐지, 언론자유 보장, 평화적인 정권교체, 노동 3권 보장, 통일주체 국민회의 자진해산 등 자유민주주의, 법의

9)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 - 지배.전통.강압과 동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역사비평], 2004년 여름.

지배, 인권보장 등의 요구와 기본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 유신체제에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준 78년의 국민선언에서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지도자를 뽑고 교체할 수 있는 의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sup>10)</sup> 학생들은 “유신헌법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현재 무법상태에 있다”<sup>11)</sup>고 비판하였다. 그런데 당시의 학생들과 재야세력이 주장했던 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인 구체적 개혁이나 제도 개혁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기 보다는 주로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의 담론이었으며 유신체제 붕괴를 목표로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자유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와 함께 제기되었는데, 그것은 개발독재가 기복적으로 친자본, 민중배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제기된 노조민주화, 노조설립의 자유의 추구, 노동자 인권보장 등의 구호는 맹아적이지만 민중민주주의의 요구를 담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민주화에 머물지 않고 약자의 요구와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는 정부, 관료, 언론, 지식사회 등을 요구한 것이며, 안보/성장 두 축을 기둥으로 하고 있던 지배질서의 변혁의 요청이었다. 박정권은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기독교 인사들의 민중지원운동 일반을 ‘빨갱이’로 몰았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기독교계의 비판적 목회자나 청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인권헌장을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들은 70년대 후반에 올수록 더욱더 강한 민중민주주의를 제창하였다.<sup>12)</sup>

특히 당시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준 함석헌은 애초부터 5.16 쿠데타를 4.19에 대한 배반으로 보았으며, 박정권의 태생적 한계를 가장 철저하고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그는 박정권의 독재의 측면만 본 것이 아니라, 반민중적 측면(씨으을 업신여긴 실)을 함께 보았으며, 반혁명성과 반동성, 군사주의, 도덕적 타락, 위선의 측면까지 지적하였다. 이처럼 박정권을 정면에서 비판한 사람은 드물었으며, 또 반민중적 측면을 부각시킨 지식인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점이 많은 재야인사들이나 학생들에게 공감을 일으켰다.

결국 박정권 하의 민주화 운동은 파시즘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자율, 그리고 정치는 물론 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 회복을 지향했던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박정권은 모든 국민을 경제성장/안보라는 국가목표 하에 복종하면서 오직 생물학적 본능만 충족시키는 노예가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당시 학생들의 구호에는 단지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상으로 박정권이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거부가 나타난다.

“10월 유신이라는 구호 아래 이 나라는 오직 10억불 수출, 1,000불 소득이라는 계수조작을 위한 국가로 전변되었으며 모든 국민은 정보·폭력통치의 채찍아래에서 건강하고 인간적인 생활도 누리지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보지도 말고 오직 저축하고 노동할 것만을 강요당하고 있다”<sup>13)</sup>

전체주의적 현실타협만을 강요하는 식민지 교육의 재현, 교육 현장에서는 시녀노릇만 강요되고 있는 실정, 일제 시대 교육직어의 재판인 국민교육현장과 충효사상에 이르는 교육이념과 사상. 학생들은 창조성이나 다양성 대신에 경쟁심, 모방성, 획일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sup>14)</sup>

10) “3.1 민주선언”

11) "1978년 10월 17일 국민선언"(402명의 서명, NCC,1924)

12) 민주노조는 민주사회의 구성에서 뺄 수 없는 요소다. 민중의 이해와 지지기반에 선 정권만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집단이라고 볼 때 민주학생이 현 파쇼체제 하에서 노동운동에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근로대중, 민중생존권 선언”(1978.9.20, 서울대 시위 선언문, NCC, 1934쪽)

13)한국신학대학 학생회, “선언문”, 1973.11.20, 이화여자대학교총학생회, “팔천 이화학우들에게”, 1973.11.28)

14) “민족.민주 교육을 위한 우리의 주장”(1978.9.13, 서울대 시위선언문, NCC, 1922)

여타 과시즘 국가에서 그러했듯이 한국의 경우 분단과 전쟁, 그리고 반공극우체제의 형성 과정, 그리고 군사독재와 유신 과시즘 하에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성향의 중간층과 지식인은 군사독재에 비판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순응적이고 복종적 태도를 취했다. 그래서 20세기 여타 후발국가가 그러했듯이 언론과 사상의 자유, 국가 통제와 간섭 배제, 학원의 자율성 등 부르주와 자유주의 가치를 옹호한 세력은 중간층 일반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관련 학생과 재야세력이었다. 오늘날 일본의 극우파들이 자신의 입장을 ‘자유주의’ 사관이라고 지칭하고 한국의 뉴 라이트(New Right)가 저기 조직 명칭을 ‘자유시민연대’ 라고 부르고 있듯이 한국에서도 ‘자유’의 레토릭은 대체로 국가, 권위주의 체제와 충돌하지 않았으며 반공주의, 혹은 극우이데올로기와 결합되었다. 그래서 박정권 시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중민주주의가 충돌한 것이 아니라 이 두 흐름이 국가주의, 안보/성장 담론과 충돌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화 운동 세력 내부에서 견기되던 자유민주주의/민중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분화, 대립한 것은 1987년 이후였다고 볼 수 있다.

## 2)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사회정의 수립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던 유신 시절 정치계급은 부패의 극을 달렸다. 70년대 말 이들 정치계급의 부도덕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 ‘3대 스캔들’ 이다. 즉 현대 아파트 특혜 분양사건, 경북도교육위원회 교사자격증 부정 발급 사건, 성낙현 성추문사건이었는데, 이 모두 지배층이 연루된 사건들이었다.<sup>15)</sup> NCC 는 이를 두고 “모든 것을 지식과 능률의 척도로 가늠하는 교육에서 사회공동체 의식을 가지지 못한 국회의원들, 기업가들, 관료들을 배출한 결과 ‘라고 진단하였다.<sup>16)</sup> 중화학 공업화가 본격화되고 능률주의, 실적주의,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였던 유신 지배체제 하에서 골동품상 ‘금당’ 사장 부부 피살사건, 부산 부부실종 피살 사건, ‘주호’라는 여아 납치사건, 암달러상 살해 강도 사건 등 ‘배금주의’에 기인한 새로운 범죄 행위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래서 유신 체제는 가히 부정부패의 천국이었으며,<sup>17)</sup>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 무법천지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성장’의 담론은 국민들에게 권력에 복종하되 오로지 가족의 복리만을 도모하라고 유도하는 사회 체제였다. 그것은 겉으로는 규율이 있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적나라하고 사회 파괴적인 이기심만이 작동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화 운동세력은 박정권이 위로부터 강요한 이기주의 그리고 그 반대편인 국가 혹은 정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고 정치사회 공동체 일반, 민족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성을 표현하였다. 정의의 요청, 책임감과 자기결단은 언제나 투쟁의 구호와 함께 나타났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변혁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보다는 도덕적 비판과 당위론적 문제제기, 그리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 등 신앙적 자세가 민주화 운동의 주된 정신적 기초였다.

특히 학생과 기독교 인사들의 모든 언술에는 자신이 속한 집단 혹은 박정권이 강요하는 국가가 아닌 사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이 충만되어 있었다. 대학인은 대학교육에 파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기독교인들은 교회가 제 기능을 갖지 못하는데 대한 반성과 책임의식, 부패를 비판하지 못한 교회에 대한 반성 등이<sup>18)</sup>. 젊은이를 포함한 모든 깔려 있었

1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과 기독교』, 1025

16) NCC 교사위원회, 「3대 추문에 관한 우리의 입장」, 1978.9.19

17) 노금노, 『땅의 아들』, 1, 돌베개, 1986,149. 1971년 가톨릭 원주교구에서는 ‘사회적 부정부패 일소를 위한 특별미사를 개최하고 3일간 철야 농성을 하였다. 이 때 발표된 선언문에서는 “극도에 달한 불평등과 부자유, 억압과 빈곤이 전민중생활을 무서운 절망으로 몰아넣고 소수 특권층의 끝모를 부패와 패륜, 사치와 방탕이 인간의 양심과 도덕을 송두리째 타락시키고 있다”고 당시 사회를 비판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학문제연구원, 앞의 책, 117)

18)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무력하고 인간의 상황을 외면해 온데 대한 책임의식을 느낀다”, (1971.1.10 한국기독교교수협의회 결의문 중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이웃들을 버려두고 불의에 야합하였던가”(1970.11.25,

다. 박정희 시절 민주화 운동은 종교인이 주도하였고, 실제로도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극우반공주의 지배체제는 조건이 비합법 체제변혁적 혁명운동이 아니라면, '선'과 진리의 관점에서 세상과 대면하는 종교인의 자기고백적 사회참여를 객관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sup>19)</sup> 따라서 사랑, 인권, 정의 등의 가치를 표방하는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을 필요로 하기도 했다. 히틀러의 파시즘에 반대하다가 순교했던 본 회퍼 목사의 정신이 당시 유사 파시즘이던 유신 하에서 일부 개혁적인 기독교인들에게 살아있었다. 물론 압도적 다수의 기독교는 권력과 자본의 세속화에 편입되어 들어갔지만 저항의 요소역시 존재했다.

학생들의 저항의 동기 역시 대부분은 부정의한 권력에 대한 분노였다고 볼 수 있다. 경찰의 대학 상주, 교수들과 학교당국의 굴종적인 태도, 사회에 만연한 부패와 억압, 사상의 자유의 제약, 노동자들의 비참한 처지 등이 이들을 저항의 전선으로 내몰았다. 물론 3.1 운동 이후 준지식인으로서 학생들의 자기 정체성과 역사적 사명감 등도 작용을 했다. 70년대 후반기로 갈수록 이러한 자유주의적이거나 엘리트주의적인 사명감은 점차 줄어들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성, 그리고 민중들과의 동일시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80년대 이후 반미민주족주의 혹은 계급투쟁 노선으로 이행해가는 과도기를 형성했다. 특히 이 무렵 베트남전을 비판하는 리영희 교수의 저작에 영향을 받고, 국내에 소개된 제3세계 정치경제학 서적들의 영향 하에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제3세계의 하나로 자리매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극우반공주의 지배질서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 3) 민족주의와 평화주의

박정희 정권 하의 민주화 운동은 냉전체제 이완기의 제3세계 민족주의의 부활과 세계사적으로는 맥락을 같이 하였다. 1964년 전후의 대일굴욕외교 반대 운동에서 민족주의는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 민족주의는 박정희의 민족적 민주주의, 혹은 국민교육헌장에서 나타난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이후 충효사상의 부활과 맞물린 국수적 민족주의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세력의 민족주의는 대외적인 자주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일본과의 굴욕적인 관계 청산, 매춘관광 반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관계에까지 그러한 주장은 확대되지 못했다. 박동선 사건, 카터 행정부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한.미간의 관계 정상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반미적인 구호는 없었다.<sup>20)</sup>

당시의 민주화 세력은 '민족'이라는 담론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박정희의 국가주의적, 군국주의적, 대외의존적 정치 행태를 비판하는데 오히려 초점을 두었다. 학생 군사교련을 반대하는 논리 중에서, "군국주의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낳고... 동서의 해빙무드에 반하며... 향군제도, 월남파병 등과 함께 전쟁애호 국민인 듯한 인상을 주고... 남북한이 군비확장에만 몰두한다면 민족자멸을 초래할 것이다"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sup>21)</sup> 당시 민주화세력은 군국주의의

고 전태일 추도예배 참석자들의 '헌신 고백문' NCC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3, 1987, 1794쪽. "우리교회는 너무 안일한 길을 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고난을 함께 지려는 신앙의 결단은 소홀리 하고 있습니다"("1977년 부활절 메시지", 1977.4.8.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19) 국가기구가 모든 시민사회 영역을 통제했던 당시의 지배체제 하에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은 거의 불가능했고, 저항은 혁명가적인 열정 혹은 신앙인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했다. 남민전 사건은 전자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으나 공개적인 장에서는 신앙인이 주로 역할을 했다.

20) 오히려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주한미군철수에 관하여 박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1977.2.7(NCC인권위원회, 1114-1115쪽)

21) 서울법대 자유의 종 동인회, "학생 군사훈련이 갖는 문제점", NCC 인권위, 1975쪽

안보개념을 전면에서 비판하면서 평화 민주 통일의 길로 나아가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들의 민족주의는 평화주의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박정희의 선건설 후통일, 남북한의 영구분단도 반대하지만, 무조건적인 통일도 반대하고 있다. 요컨대 그들은 민주주의, 혹은 민중주의를 전제로 한 통일을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2)

그러나 학생들이 보다 강한 반외세, 민족주의를 견지한데 비해, 함석헌과 같은 기성 기독교인들은 평화주의의 가치를 더 강하게 견지하였다. 특히 함석헌은 민족은 소중하지만 민족주의는 위험하기 때문에, 당시 학생들이 내세운 민족주의가 낡은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어떤 형태의 국가나 전쟁, 그리고 민족주의라도 그것은 전쟁으로 나아가거나 인간을 새롭게 속박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보았다.

“나는 젊은이들 보고 말합니다. 민족주의는 지난지 오래다. 그런데 학생들은 안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세계적 관련 위에서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그들이 사상적으로 많이 뒤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2차대전이 나는 것을 보고 나라라는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형편에 60만 군대를 가지고 있어서는 문화발전이 어렵다고 봅니다”23)

70년대의 시점에서 함석헌 외에 박정희 식의 부국강병론과 국가주의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고, 그리고 부정부주의, 혹은 전통사상이나 노장철학에 기초해서 반국가주의의 평화사상을 견지한 인사는 거의 없었다. 이것은 당시 민주화 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민중주의 철학 외에 박정희 체제를 식민지 근대화, 혹은 근대 자본주의의 물질문명의 한 변형된 형태로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말도 된다.

#### 4. 오늘의 시점에서 본 민주화 운동

##### - 박정희 신화의 부활과 시장 근본주의

권위주의 혹은 파시즘의 문화적 토대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사실 울프가 지적한 것처럼 아도르노의 ‘권위주의 퍼스낼리티’의 논리는 사회주의 붕괴 이후 지금에 더 잘 맞아들어 간다.24) 미국의 신보수주의 세력 즉 네오콘은 바로 과거라면 사실상 파시즘 세력들이라 볼 수 있다.25) 한국의 박정희 향수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지구화된 세계 경제질서의 이데올로기적 상부구조라 할 수 있는 시장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는 문민정부 하의 한국의 지배이데올로기로 등장했다.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적 표준에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은 전방위적으로 주어지는데 그 핵심은 바로 시장원리이다. 그런데 지구적 시장 근본주의는 9/11 이후 애국법안(U.S Patriot Act)을 통과시킨 미국이 그러하듯이 시장 파시즘, 혹은 기독교 파시즘의 요소와 결합되어 있으며,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이후의 시장주의는 분명히 파시즘적 요소와 결합되어 있다. “시장에 대한 관점이 약한 사람은 취업 시 고려

22) 우리는 백지식의 선통일은 반대한다. 내용있는 통일, 즉 민주통일을 원한다는 입장. 평화를 바라지만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는 댓가를 만족해 하면서 평화를 원하지는 않는다. “3.1 구국선언”(NCC, 1911)

23)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함석헌전집 4, 한길사, 1983, 354-356

24) Alan Wolfe,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Revisited", *The Chronicle Review*, Vol. 52, Issue 7, October 2005.

25) 줄고, “미국 네오콘의 제국경영”, 『황해문화』, 2004 봄.



하겠다“는 김상렬 회장의 발언은 ”좌경불순 학생은 숨어내겠다“는 박정희, 전두환 시절 공안당국의 극우반공주의 혹은 유사 파시즘의 재판인데, 이제는 그러한 위협의 당사자가 군부, 공안세력이 아니라 무노조, 성장지상주의, 권위주의 시절을 익숙하게 생각하는 기업주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시장 근본주의와 유신독재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가치, 그것이 표방하는 정책이 실로 유사한 정서와 입지를 갖는 세력에 의해 주창되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대기업, 행정부 특히 경제부처, 보수 언론이 그들이다. 이들이 박정희 지배를 정당화했던 안보/성장이라는 두 기둥은 오늘날에는 주로 효율성과 경쟁력 즉 시장 근본주의로 나타나고 있다. 이 안보/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가 역설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그것은 바로 획일성이다. 누구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이며, 사회의 자율적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다.

한국은 아직도 권위주의 혹은 파시즘 바이러스가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기업과 정부조직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 조직의 운영원리로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사회다. 식민지 말기의 파시즘에서 교육받은 70대 이상,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길러진 50대 전후의 한국인들이 그 주역들이고, 태어나서부터 소비사회에 길들여진 20대들은 잠재적으로 이러한 극우 파시즘에 동원될 가능성이 높은 세력이다. 민주화 운동의 정신은 바로 파시즘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해독제다. 편견과 차별, 권위주의와 맹목적 집단주의, 테러와 폭력을 거부하고 인간간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운동이었다.

## 5. 맺음말

유신 지배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일제시기 이후 지배층에 속했거나 경제적으로 상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는 자신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에 박정권을 지지했다. 대체로 그들에는 인생철학을 제외하고는 분명하고 일관된 정치 사회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구의 전통주의자나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이들은 민족이나 국가라는 단위를 진정으로 존중하지 않았으며, 민족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경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은 유교적인 문화와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전통가치를 철저히 주창하는 사람들도 아니다. 반공, 성장이라는 구호가 그 자체가 불모의 구호이자 가치 이전의 가치이기 때문일 것이다. 유신 체제 하에서 지배체제의 편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지식인들은 권력과 부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사상적으로나 학문적으로도 별로 의미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독재와 파시즘이라는 것이 인간의 자율성, 창조성, 비판성을 용납하지 않는 기본적으로 불임의 체제이며, 그것에 순응했던 인간에게 지적인 용기와 창의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박정권의 정신적 토대가 얼마나 취약했는가는 최근의 박정희 기념관 건립 기금 모금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 100억원이상 국민모금을 조건으로 정부가 기념관 건립지원을 하기로 했으나 사업만료일을 앞두고 급히 모금한 내역을 보면 전경련 50억, 무역협회, 대한상의, LG가 모두 2003년 1월에서 3월 사업만료일을 앞두고 모금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순수 민간 기부액은 12억에 불과하며 그것도 제일동포 사업가가 5억원을 낸 것이 포함되어 있다.<sup>26)</sup> 정부에서는 모금 기간을 2004년 10월 31일까지 연장해 주었으나 모금액은 108억에 그쳤고, 그 중 90억은 이들 기업가 단체들이 기부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004년 상반기 국민 성금은 380만에 그쳤다. 결국 200억원의 모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박정희 기념관은 2005년 4월 정부가 지원금을 회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박정희 덕분에 오늘의 경제적 부를 얻은 수십,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살아있지만 그들은 성금이라는 적극적인

26) [한겨레신문], 2003.4.10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그 시절 극히 어려운 조건에서 불철주야 기업을 일구어서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관료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의 생계를 도모하기 위해 헌신한 많은 보통의 한국인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은 일제 말기의 보통의 조선인들이 그러했듯이 지배체제의 톱니바퀴에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용기를 갖기는 어려웠고 역사발전에서 종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그에 반해 70년대 민주화 운동의 주역들은 정치 문화 영역, 정신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개척했다. 함석헌의 경우는 드물게도 우주론의 차원까지 인식의 지평을 높인 사람이지만, 다른 저항운동가들 역시 단순하게 반정부 의식 이상의 가치와 철학을 어느 정도 견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 그들은 새 정치 운동을 실천했고, 진보정당을 결성했으며, 새로운 언론과 미디어를 창출했다. 대안공동체나 대안학교, 대안 에너지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환경운동, 지역 풀뿌리 민주화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

향후에도 정치권력은 반복 교체되겠지만, 적어도 당분간의 한국사회는 이러한 7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정신적 에너지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민주화 운동은 단순히 박정희 정치권력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인간은 노예화하고, 정신을 위축시키며, 인권을 탄압하는 체제에 맞서서 인간성을 실현하려는 몸부림이었으며, 바로 그러한 자유정신과 민주정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과 민중사랑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창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성수, [함석헌 평전- 신의 도시와 세속도시 사이에서], 삼인, 2001
- 조희연, "박정희 시대의 강압과 동의-지배. 전통. 강압과 동의의 관계를 다시 생각한다", [역사비평], 2004년 여름
- 함석헌,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함석헌 전집4, 한길사, 1983
- 로버트 O. 팩스턴, 손명희. 최희영 옮김, [파시즘-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교양인, 2004,
- NCC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 운동], 1.2.3.,
- Adrono, Theodor,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W W Norton & Co Inc; Abridged/Rei edition, 1993(1950)
- Robert O Paxton, "The Five Stages of fascism", [www.cursor.org/stories/fascismxiii.php](http://www.cursor.org/stories/fascismxiii.php)
- Wahkonta Anathema, Fascism in America, Politics, December 25, 2003
- Alan Wolfe,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Revisited", The Chronicle Review, Vol. 52, Issue 7, October 2005.